

한국노총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진국 경제 진입이라는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어있던 대량실업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고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고용의
안전지대만 경험해왔던
한국노동조합운동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실업대란의 시대’를 맞아
노동조합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노총의 대책을 점검한다.

1. 문제의 제기

실업대란의 시대가 왔다. 고용조정제의 법제화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진행되어 온 정리해고는 이제 직장마다 대량해고의 태풍을 몰고 오게 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생계 보조가 극히 빈약하고 사회복지 기반도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실직은 바로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한편 파견노동제의 확산에 따라, 현재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절반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파견근로의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의 개념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안정된 내 직장”이나 “우리 회사”的 개념은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

실업은 당사자의 분노와 좌절감, 빈곤, 가정파탄, 자녀의 열등의식 초래 같은 개인적인 고통 말고도, 범죄와 불안심리 증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실업과 빈곤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한 우리나라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물론 한국사회의 최대 위기의 요인이다. 최고의 국정 및 노동운동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라에서는 최근 30~50대 가장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킨 노동자들에게도 시련은 가해지고 있다.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IMF 시대와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상여금과 수당이 삭감 또는 폐지됨으로써, 불과 한 두 달새 월급 봉무는 눈에 띄게 알아졌다.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인봉제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일드워 도입하고 있다. 안그래도 없어진 열자리 직원의 몫까지 일하느라 힘겨운데, 이제는 살아남은 직원들끼리도 눈치보고 경쟁하느라 직장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바야흐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사회의 최대 위기의 요인이다. 최고의 국정 및 노동운동 목표로 등

장하고 있다.

2. 현단계 실업의 특징과 정부대책의 문제점

실업률 8%선은 체제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주장되고 있다. 한편, 현재 실업률은 6%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동운동 전영의 대안제시와 노동운동 방향을 짐짓하기 위해서는 한 시기 실업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실업은 과거의 그것과는 달리 내체로 실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대량발생성·일시발생성·집중발생성·집단발

생성, 실업대상 및 실업에 대한 수용도와 관련하여 무차별성·무경험성·무귀책성·무대책성, 실업 기간과 관련하여 장기화 가능성 따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실업은 (1) 무경험성과 무대책성과 관련 이번 실업은 우리가 역사상 한번 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 같은 사회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크며,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책도 잘 수립되어야 함에도 반대로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는 것 (2)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그것도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실업이 일정한 속도와 수위로 조절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정책(특히 재벌개혁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정부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 현재 재벌기업에서 구조조정이 곧 정리해고인양 인식되고 있거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대체적(trade-off)인 것으로 파악하고 택일하라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은 노동자를 불모로 재벌개혁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3)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이 실업자에 대한 계층별·연령별로 세분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기왕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심리와 이로 인

한 부작용(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예컨대, 불법 행위 근절 등) (4) 이번 실업은 과거의 통상 해고나 징계해고 또는 자발적 실업과 달리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로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허용 되지 않고, 현 경제위기

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은 현실민족의 안이성, 실업자 전망 및 추계의 비현실성과 비과학성, 정책대안 수립에 있어서의 철학의 부재와 무원칙성, 죽종성, 단발성 및 정체혼선과 학상행정, 실업재원조달의 무책임성과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불법은 더욱 더 심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규명과 동시에 불법간원의 근절이 절대 요구된다는 점 (5) 일단 실업이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더욱 심각하며 따라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등의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실업이 가져오는 각종 사회병리현상 치유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인식했던 사회풍토를 사회구조 문제로 인식하도록 바꿔야하고 정부 및 기업의 대책 또한 이

런 전제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을 보면 현실인식에 있어서의 안이성, 실업자 전망 및 추계의 비현실성과 비과학성, 정책대안 수립에 있어서의 철학의 부재와 무원칙성, 즉흥성, 단발성 및 정책혼선과 탁상행정, 실업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무책임성과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실업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한국노총의 문제 인식

정부 발표와 전망에 따르더라도 이미 실업자가 4월 말 현재 15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는 완전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지만 이미 노동계에서는 금년초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면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것이다.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에 대한 현실인식과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해 12월 4일 김대중 전영파의 정책연합 외장에서 '(중앙)고용안정대책위원회' 및 '산별 지역별 대책위'의 구성으로 그 긴박성을 인식, 사회 문제로 제기하였다. 물론, 고용안정 문제의 중요성은 한국 경제의 중저성장 체제로의 진입과 구조조정이 예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당면한 최대 운동 목표로 논겨진 것이었지만, IMF 구제금융의 한파가 더욱더 노동조합 전영의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면서, 한국 노총으로 하여금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노

동운동의 목표로서 '고용안정 쟁취'를 제기케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이른바 '노사정 대타결' 이후 정리해고의 급증이 우려되면서 한국노총의 고용 및 실업문제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은 '실업대책'에 더 옥더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된다. 한국노총은 '종합실업대책본부'를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차원의 실업대책 촉구와 아울러 노동조합운동 전영 자체의 실업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심각한 실업상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동조합 차원의 실업대책으로는 실직자 생활안정 사업, 실직자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사업, 실직자 조직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2월에 있었던 한국노총 전국 대의원대회는 '종합실업대책본부'의 구성에 중요한 선언을 하였다. 이른바, '정리해고와 전면전·총력전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1998년도 한국노총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정리해고 저지'를 설정한 셈이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고제 또는 근로기준법 31조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정리해고 그 자체는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견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노자간의 역관계나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보면, '정리해고제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부와 기

업들이 '정리해고 행위'는 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 기업주 개인의 재산처분 등 자기쇄신을 포함한 해고회피 노력등을 다한 후 최후·최종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피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그토록 강조되었고, 중요하게 합의했던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엄단과 근절'이다.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노동자를 안심시키고, 사용자들의 정리해고 유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와 지난 3월 20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종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본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노총의 사업방향을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두 개의 큰 축으로 하되, 실업대책의 최선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며, 또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노총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산하조직의 고용안정 투쟁을 임단협 간

금본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노총의 모든 투쟁과 사업은
고용안정 및 실업자 대책을
정점으로 한 다양안정책과
조직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신투쟁과 연계시켜 '고용안정 협약 체결과 경영참여 확보'를 이루어 내고, 이에 대한 조직적 지원 외에도 정책적으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는 한편, 기타 대정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금리 완화를 통한 도산 방지와 고용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업자 쉼터의 개설, 실업자의 조직화를 위한 실업자 동맹 또는 산별노조 건설의 촉진,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모금운동, 부조

사업과 각종 사업의 전개 등이 보완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은 현장 차원의 임단협 간신투쟁 또는 임단협 개악저지 투쟁과 맞물린 한국노총 중앙차원의 정책적, 정치적 지원 노력 및 노사정위원회 활동 등과 연계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었지만, 현재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정년단축 및 임금삭감 등으로 노총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불법근절 및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하고 성의있

는 실업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사정 위원회 합의 사항의 파기와 2기 노사정위원회에의 불참, 나이가 현정부와의 정체 연합 정신의 파기까지를 선언하였으며,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다면 공공부문의 민주적 구조조정을 위한 총파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108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는 한국노총의 인식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1998년을 '1주 40시간 노동제 쟁취의 원년'으로 삼자는 것, 범국민적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한시적 실업 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특별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실업자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4. 한국노총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금년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노총의 모든 투쟁과 사업은 고용안정 및 실업자 대책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조직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방침은 노총 중앙본부는 물론이고, 산별과 기업단위 노조 및 지역 조직에서의 활동에서도 당연히 관찰될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6월 4일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도 지지 후보결정 등의 선거전술에 있어서도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이 주요한 슬로건으로 제기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사회생점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대책과 달리 한국노총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으로 특징적으로 요구 또는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는 (1) 범국민적 실업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2)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1주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이것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3) 고용보험을 대폭 확충하되 고용보험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라는 협소한 틀 안에 머무르지 말고, 한시적이긴 해도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4) 산입현장의 고용유지 기업 및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5) 특별히 청년노동자의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6) 실업 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최대한 기존의 인프라(infra)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 재원은 실직자 또는 고용유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실업자들의 참여와 요구에 기초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7) 정부의 재원 마련은 일차로 고용세를 신설, 조달하여 실업문제를 사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특별히 불로소득 및 검은 돈 등에 대한 중과세 등 세제의 전면적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8)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한 적극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 (9) 실업자 조직화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 (10) 장기 근속자 실업의 경우 특히 문제로 되는 퇴직금 등 임금체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11) 정리해고

제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31조를 해석함에 있어 노동자 보호법인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 법조항의 명칭이 해고 제한에 있으며 실체적 요건도 단서 조항으로 인해 더욱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점 (12) 현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졌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를 시급하게 보완, 개정하여 노사간의 고용안정 협약 체결 등을 촉진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 조직적,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노총 차원의 실업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 불법 행위 고발 및 신고센터의 개설 운용 (4월 말 현재 4,000여건 접수) (2) 실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직업상담과 조직화

를 위한 '고용안정센터' (중앙 및 지역조직 연계) 및 가정 '평화의 집' 개설 운영(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리에 개설) (3) 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공청회, 세미나 등의 조직과 정책대안 제시 (4)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의료보호, 장학

사업 등의 추진과 실업자 부조를 위한 모금사업(평화운행 및 언론사 등과 공동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한국노총 및 산별과 지역조직의 정책적 조직적 지원에 기초하여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들이 주력해야 할 고용안정 투쟁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단위노조는 '고용안정 대책위'를 구성하여 일상활동(일상적인 조사, 교육, 연구, 정책개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8년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기금의 설치, 경영참여의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의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한다. 또,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경영악화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며, 경영진의 구제사유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주와의 확보와 대표소송권 행사, 불법행위유지 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행사보장조항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또, 퇴직금, 임금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는

한계로 말미암은 '현대의 무경험 또는

실종(?)은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노동간의

현대 또는 공동 대응 역시 그러하다.

에 대한 사전보전 조치의 강구,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혜피방안, 고용보험제 활용방안,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방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경영권 변동시 고용 및 단협 승계 의무화와 조합원 범위의 확대 등 조직강화 방안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5. 대량실업의 시대 한국노동운동의 방향

- '연대' 확립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

그러나,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과 희생이 고용 불안과 실질임금 저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느냐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조직적 차원에서 단위노조와 상급노조 사이의 입장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조직화 등이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경제 살리기', '고통 분담'이라는 국민 여론을 노동사적 관점에서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는 한계로 말미암은 연대의 무경험 또는 실종(?)은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노총간의 연대 또는 공동 대응 역시 그리하다.

특히 노동운동진영은 '극단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놀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침을 조직화하지 못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수세기에는 대책 없는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펴나감으로써 실직자에 대한 정체적 배려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정부가 불법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는 결코 노동자가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 주범을 분명히 가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 계급이 노동자라는 데 이견이 없으며, 향후 고용 불안과 생계 불안의 심화, 노동강도의 강화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점이다. 노동운동진영은 제계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은 IMF 경제위기(노동자 생존권의 위기)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서 요구되는 노동운동의 정치적·조직적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대중적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사업장에서의 고용과 임금 안정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큰 틀에서 사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재벌 개혁과 경영 참가

를 더욱 힘있게 요구하고, 조직적 발전 전망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업자와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실직자와 현직노동자의 연대 고리를 만드는 등 노동운동의 조직력을 복구·배가하고 사회민

주화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 반노동자적인 유연화 공세를 저지·반전시켜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해고관련 법을 집단해고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의 남용과 부당해고를 규제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 노동시간 단축

으로 고용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대량 실업의 상황을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는 계기로 반전시키는 것, 부정축재자와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재벌총수일가의 재산을 실업대체기금으로 수용하는 것, 이 기회에 임금과 기업 복지에만 의존하던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통해 사회보장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 재벌 체제를 개별 기업으로 해체하고 부실경영 소유주의 재산을 기업부채 상환금으로 전환하는 것,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사 장부를 공개하고 노동자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에 참가하는 것, 임금의 표준생계비 미달분을 노동자에게 회사주식으로 지급해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 기초 소비재에 대한 간접세나 근로소득세 인상보다는 사치소비재 세율과 누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통해 얻은 투기꾼의

불로소득에 중과세하여

구조 조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고용창출을 함께 도모하는 것, 거시적 성장의 둔화를 그동안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와 사회생태적 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는 것 등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한국사회의

성장전략과 부패구조를 새로운 발전전략과 총체적 개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6. 결론에 대신하여 - 양대 노총의 공조체제 확립 가능성

끝으로 향후 새로운 연대의 모색과 관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양대 노총의 공조체제가 새롭게 가동될 가능성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빈발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목적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봉급을 일방적으로 10%씩 삭감하였다. 실업재원 마련이라는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지난 4월 27일 이례적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한국노총 지도부와 신임인사 겸 간담회를 갖고 몇 가지 원칙에 합의 내지 공감을 가진 것은 노동계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자 두 노총 공조체제의 부활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업) 공무원 노동조합(철도노조, 체신노조 등)과의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노조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방적인 정년단축과 감원 및 공기업의 해외매각 방침으로 이어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오는 5월말에 공공부문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4월초 파견제 확산저지를 위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 이어 산하 산별 단위에서도 철도노동조합을 위시하여 본격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6년과 97년도의 총파업시 위력을 발휘했던 두 노총의 공조체제가 대선과 노사정위원회 타결 및 거부와 민주노총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소원했다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을 거치면서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지난 4월 27일 이례적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한국노총 지도부와 신임인사 겸 간담회를 갖고 몇 가지 원칙에 합의 내지 공감을 가진 것은 노동계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두 노총 공조체제의 부활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이후 한국노총은 4월 29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연대투쟁 방침에 적극적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이것은 지난 해 12월 26일 외환위기를 극복한 직후에 워싱턴포스트지가 '예견(?)' 했던 것처럼 DJ정부의 두 날개를 쥐고 있는

왼쪽의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오른쪽의 유종근 지사간의 협조가 얼마나 잘 것인가가 한 축이며, 또 다른 한 축은 두 노총간의 공조가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잘 것인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앞날과 노동자 및 민중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으로 향후 전망을 힘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순탄한 '위기 극복' 경로를 위한 필요 조건은 재벌과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감한 개혁과 사회 지도층의 고통분담을 위한 솔선수범이고, 충분조건은 불법행위의 근절과 충분하고 성의있는 실업대책의 마련일 것이라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축 가운데 불가피하게 후자의 축이 한국社会의 변화의 방향을 가늠짓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